

# “한반도 평화의 봄, 스스로 만든 결과”

문 대통령, 광화문광장 3·1절 100주년 기념식서

“독립운동 정신·국민통합 바탕 ‘신한반도체제’ 일괄 것  
중단철도 완성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앞당겨  
우리 역할 중요… 북미 대화 완전한 타결 반드시 성사  
빨갱이·색깔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한 걸음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중단철도 완성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앞당길 것”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중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하게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담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 역할 더욱 중요… 북미 대화 완전한 타결 반드시 성사”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비핵화 합의 결렬 이후 하루 만에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 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 “빨갱이·색깔론,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온 숙제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다.여기서 ‘빨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마친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말도 생겨났다”며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니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살아야 했다”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 국방당국,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종료 결정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새너핸 장관대행은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

“비핵화 노력 뒷받침”

한 향후 공조 방안과 연합준비태세 유지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키리졸브연습의 명칭을 한글로 바꿔 4일부터 7일

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훈련의 명칭도 더는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 부대 위주 훈련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이런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간다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

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역대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만나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광온 “구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유튜브 영상 삭제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구글 코리아는 일본군 성 노예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9개 채널에서 ‘위안부는 고역 보

수를 받는 매춘부였다’는 등 9개 영상이 생산·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구글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는 물론 해당 영상들에 대해 당사 삭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7일 전후 중폭 개각... 행안부·국토부 등 7곳

현역 국회의원들 중 진영·우상호·박영선 등

국토부장관에 최정호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출신으로 임각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7명 인력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략적인 발표 일정은 정해졌다”며 오는 7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각 대상에는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17기에 입각한 장관 4명이 유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김영

민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들은 모두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데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물러난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기 내각 인사들이 당으로 복귀하면서 그 빈자리는 당 출신 현역 의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에 4인인 진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3선 우상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선 박영선 의원이 각각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 명 중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외에도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인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해수부 차관,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유예중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언급된다.

민중당 해운대 갑 지역위원장이나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

성이 높다. 후임으로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4선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여러 언론에서 거론되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해성 통일부 차관의 이름도 오른다.

반면, 1기 출신인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유임된다.

다만, 거론되는 대상자 중 후임 인사 검증이 미비할 경우 4월 재보선 이후 시점으로 올해 2차 개각이 진행될 수도 있다. 또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재보선 이후 또 한번 개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與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업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비상 식위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한유총 소속 사업유치원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불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업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아이들

을 불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유총을 향해 “사업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적극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